

美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수두룩’ 개인·기관, 채권 투자행보 잇갈려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금리 상승세 개인, 채권형 ETF 8900억 순매도 기관, 개인 순매도 종목 1조 순매수

“미국 국채는 믿을 만하다면서요?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아서 채권 가격이 오를 다면서요? 그런데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 모양인가요?”

2025년 1월 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7%를 찍자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쏠쏠돈을 투자했던 회사원 이모(43)씨는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자 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 초중반까지 떨어지자(채권 가격 상승), ‘드디어 계좌에 별이 드는구나’ 싶었지만 채권 금리 그래프가 최근 다시 바짝 고개를 들었다(채권 가격 하락). 현재 이씨의 ETF 수익률은 -9%. 이런 투자자가 수두룩하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미 국채 투자 붐이 분 지 2년여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바짝 올렸던 미국에서 다시 금리 정상화 기미가 보이자, 장기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가 몰렸다. 국내 상장된 ETF 등을 통한 미국 장기채 투자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는 커녕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치솟았고, 투자자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27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 미국 장기채 ETF 순자산 상위 10개 종목의 연초 이

후 수익률(분배금 포함)은 평균 -7.78%다.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H)이 -13.72%로 가장 부진했고,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13.33%),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H)(-9.4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연초 이후 19~31%대 손실을 낸 국내 30년 국고채 ETF보다는 낙폭이 작다.

환헤지 여부에 따라 희비도 갈렸다. 순자산이 가장 큰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1조4766억원)는 -4.39%였지만, 기초지수가 같은 환노출형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는 -9.37%로 손실이 두 배를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39.0원에서 23일 1358.4원으로 약 5.6% 떨어진 탓이다. 엔화노출형 2종은 원·엔 환율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면서 평균 -13.53%로 가장 부진했다.

손실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에서 발을 뺐다. 연초부터 지난 22일까지 개인은 상위 10개 종목에서 약 890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들 종목 전체 순자산(약 5조원)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2438억원),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2288억원) 등 9개 종목이 채권형 ETF 개인 순매도 1~9위를 휩쓸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이들 종목 중 8개를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도 장기채를 외면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TBro)에 따르면 연초 이후 23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ETF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에 미국 장기채 ETF는 하나도 없었다. 대표 상품인 iShares 20+ Year Treasur

y Bond ETF(TLT)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 대신 만기 3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 ETF(SGOV)를 6억6390만달러어치 사들여 13위에 올랐다. 가격 변동 위험이 큰 장기채 대신 이자만 챙길 수 있는 초단기 상품을 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국채 20년물 입찰에서도 저조한 수요가 확인됐듯, 전방위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분위기에 동반한 미 국채 투자 수익률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70%가량 반영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져, 채권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의 양과 동시에 연준이 추가로 1차례가 아닌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허성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연말 이후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며 장기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면서도 “아작까지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미국의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장기금리 추가 상승 리스크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왼쪽부터) Billy Miller 시큐리티이즈 COO, 박재만 KB증권 AI·디지털본부 상무, Kyle Jenke 옵티미즘 파운데이션 COO 등이 지난 21일 국내 기관 토큰증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 기관 대상 토큰증권 사업 추진

시큐리티이즈·옵티미즘 3자 MOU

KB증권은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티이즈(Securitize), 이더리움 레이어 2네트워크 ‘OP 메인넷’을 운영하는 옵티미즘 파운데이션(Optimism Foundati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KB증권은 금융상품 인수·발행·판매 역량과 기관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상품 공급을 담당하고, 시큐리티이즈는 토큰

화 인프라, 옵티미즘 파운데이션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KB증권은 우선 기관 고객을 위한 토큰화 MMF와 KB자산운용의 대표 투자 전략을 담은 토큰화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국내 토큰증권 제도 정비에 맞춰 주식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회사채, 국고채 등으로 대상 자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KB증권은 시큐리티이즈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함께 토큰화한 기존 펀드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금융당국, 검사 중간발표 등 행정쇄신 예고

‘소비자보호’ 중심 개선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해 논란이 되는 일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의 예외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에 이메일·메신저 내용 등을 요구할 때는 임직원의 사생활 관련은 선별해 검사 관련만 제출하도록 관행을 고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번 내용이 포함된 금융행정쇄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공익적 필요’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외기준의 윤곽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예외기준이 될 걸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요구 절차 등 다른 문제적 검사 관행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가령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이메일 등을 요구할 때, 검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선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부의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제재 사전통지서 내용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쟁점과 제재 관련 정보가 담기도록 형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전통지서 내용이 압축적이어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이 함께 하는 금융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가 쇄신방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막바지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민연금 ‘1점’ 가점에 금융사 줄줄이 전주행

자산운용사 중심 거점 마련 움직임 실질적 업무기능 이전은 미지수

정부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주 이전을 결정했다. 올해 초 ‘지역 이전 자산운용사 인센티브’를 언급한 대통령 한마디에 KB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현지에 핵심 계열사를 냈다. 특히 위탁운용사 경쟁에서 단 1점의 가점이라도 확보하려는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전주 사무소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IBK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이시스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등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시픽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도 전주행에 나섰다. 국내 자산운용 선두를 다투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전주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전주 거점 구축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우리·KB 등 금융그룹들이 은행과 증권, 운용 계열사를 아우르는 전주 거점 마련에 나서면서 개별 자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라 자산운용사들의 전주 거점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운용사의 사무소 개설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전주 진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운용사들이 전주로 향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 업무거점을 둔 운용사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인프라와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거점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 가점 1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

금 위탁운용사 선정은 운용 성과와 운용 인력, 투자전략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만큼 경쟁사 간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1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규모를 고려하면 전주 거점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탁자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운용업계 최대 ‘돈 손’인 국민연금 추진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가점 1점도 기본 점수가 될 확률이 높다”며 “현재는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가점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인력과 업무기능을 전주로 옮기는 데는 여러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무소 개설이 곧바로 실질적인 업무 기능 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핵심 인력과 투자 의사결정 조직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역과 리서치 인력의 경우 기존 생활 기반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전주 근무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운용사는 전주에 사무실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본사 인력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100만원 이하 연 1%, 초과분 연 0.6%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맡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며 고객 혜택 확대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자 지급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 혜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달부터 나올 전

망이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단기간에 수조원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청약 기간 동안 증거금에 이자가 붙으면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